

다산포럼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제대로 하려면

어려울 정도이다. 공적 연금의 재정계산에서 근간이 되는 것은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이다. 전자는 보험료 수입과 운용수익으로 구성되고 후자에서는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급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정계산은 국민 연금에 대해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일종의 '재정 점검'이다. 다시 말해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제도가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다. 재정계산의 신뢰성과 정확성은 재정계산에 들어가는 경제와 인구에 대한 전제를 얼마나 정확히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 상승률, 보험료 납부자 수 관련 출생률, 물가 상승률, 연금 수급자 수 관련 평균 연령, 운용 수익률, 나아가 실질 경제성장률 및 총요소생산성증가율 등이 모든 게 다 재정계산에 들어가는 필수불가결한 전제들이다. 1988년 국민연금이 제도화된 이래 재정계산이 이번까지 총 네 번 이루어진 것에서 우리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역사가 국민연금 역사만큼이나 아직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이 완결성과 체계성, 정확성 면에서 공적 연금 제도가 성숙한 다른 선

진국에 비해 아직 다소 부족한 면이 존재함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계산과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최대 결함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목표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최종 책임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전문가들 심도 있는 논의를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이번 제4차 재정계산을 위한 제도발전위원회가 처음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에 비해 재정계산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재정 추계위원회가 재정 목표 설정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장기 재정 목표 없이 재정추계를 수행한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으므로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이 국민연금의 제도적 측면과 자금 운용 측면에서 분리 불가능할 정도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보

다 엄밀하고 정확한 재정계산을 위해서는 세 위원회(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간에 긴밀한 논의와 상호 의견 개진 과정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위원회가 장기 재정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재정추계위원회의 검증이나 상호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장기 재정 목표의 근거와 신뢰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개선위원회가 제시한 장기 재정 목표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재정추계 위원회의 무성의한 대응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1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판에 70-100년 뒤의 먼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은 단순히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내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중장기 미래상과 미래 발전 전략과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계산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요함과 동시에 전문가 간에 아주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거듭되어야 한다.

社說

광주 재판 외면 전두환 강제 구인 마땅하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광주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 전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히더니 끝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호석 판사는 어제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에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전 씨 대신 정주교 변호사가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전 씨가 알츠하이머 증세로 출석이 어렵다며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릴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 씨가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과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다음 공판을 10월 1일로 지정한 뒤 마무리해야 했다. 전 씨 측은 그동안 첫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거듭 밝혀 오다가 하루 전에야 불출석으로 입장을 바꿨다.

출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부인해 왔던 알츠하이머 진단을 공식화하자 일각에선 5·18 관련 각종 형사 책임과 1000억 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 등 각종 민·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설사 건강 이상이 사실일지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상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재판부에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5·18 유혈 진압을 주도하고도 틀만 나면 외곡을 일삼아 온 전 씨가 현장인 광주에서 참화와 사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를 외면했다는 점에서다. 재판 출석에 대한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도 재판부를 우습게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를 준만큼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전 씨를 강제 구인하는 게 마땅하다.

대통령 공약 '지방 분권' 구두선에 그쳐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인 '지방 분권'이 1년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어서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방 분권의 두 축인 '재정 분권'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과 '자치 분권' (자치경찰청, 주민참여·자치강화 등)의 최종안 발표 일정을 남기고도 아무런 실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의 경우 종합 대책을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도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법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 재정 분권 권고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청와대는 종합 대책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재정 분권 TF 권고안은 지방 소득·소비세를 늘려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지방 재정은 지금보다

10조 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재정 분권 정책이 표류하면서 지난 5월 개헌안 부결 이후 '대통령이 분권 의지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자치분권에 마찬가지다. 이번 주에 열리는 문 대통령과 민선 7기 시·도지사 간 첫 간담회에서는 핵심 의제였던 '자치분권 로드맵'이 빠졌다. 청와대와 지자체의 이런 견해차는 조만간 조정된다. 지난 6월 까지 마무리 것됐던 자치경찰청 기본계획과 각종 자치 관련 법률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물론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일자리 창출 정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치 분권을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재정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국가적 과제다.

NGO칼럼



최송훈 전남환경운동연합 대표

흑산공항 건설 꼭 필요한가

또 여객선 결항률을 20%로 하겠다고 11.4%로 수정하였는데, 평가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사업성 문제보다 중요한 교통 안정성 문제는 더 심각하다. 선택 기종인 ATR 42 50인승 프로펠러 경비행기는 최근 10년간 9건의 인명사고를 낸 매우 위험한 기종이다. 또한 337종의 철새 이동 경로와 겹치는 소형 항공기 운항은 대형 비행기의 철새 충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대체 서식지 조성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공항 시설법 시행규칙 제 47조 6항에 의하면 공항 반경 8km 이내에는 어떤 조류 유인시설도 설치 할 수 없기 때문에 흑산도에 대체 서식지 조성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흑산공항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과 계약 예규 등의 관계 법령을 개정해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수의 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하였고, 금호컨소시엄은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수의 계약에 따라 실시 설계 인센티브를 통한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 말 최저 입찰이 아닌 가격 협상력을 높여 주는 형태로 특혜를 받게 된 셈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행된 불법과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한 이때, 흑산공항 문제 역시 현실적으로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아닌 '감사'가 필요하며, 당장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중단하고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건설교통부와 일부 정치인들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 운운하며 공항 건설을 강행하기보다 연간 15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연간 여객선을 버스와 철도, 지하철과 같이 대중교통으로 분류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투자액 중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안 여객 운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시설과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인 여객선 공영제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를 되살려서 모든 국민들이 부담 없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 흑산도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이곳이 갖고 있는 천혜의 경관과 잘 보존된 생태계를 지키고 가꾸는 것이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 판단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오는 9월 20일 흑산공항 건설 재심의로 이 모든 우려와 불신을 정리하여 국립공원을 국립공원답게 보존하고 공항 건설 논란에서 드러난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소득 보전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전남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하여 강행하지 말고 이번 재심에서는 엄격한 중립을 지켜 주길 바란다.

기고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광주다운 도시 재생 프로젝트

키오 상품화·브랜드화해서 좋은 일자리 만들고 광주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등산 관광단지의 호텔도 광주답게 짓고 전통 문화 마을과 전통 브랜드 공연을 만들고 광주다운 시티 투어, 대표 음식을 발굴하는 것 등이 광주다운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굴의 정신을 상징해 광주 정신과 부합하는 담쟁이를 광주천변이나 주요 건물 외벽에 심어서 광주를 찾는 모든 외지인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간판 하나 하나까지도 광주답게 디자인 하자는 것이다. 광주의 관문인 돌계이트나 송정역 등에 광주다운을 상징할 조형물이나 특색 있는 건물이 지어지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어떠한 것이 과연 광주다운인지, 큰 틀과 큰 방향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들은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도시 재생국의 전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보기로 했다. 지난 16일 도시 재생국의 전직원들은 민선 7기 '그레이트(GREAT) 광

주'를 위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는 그동안 일상적으로 추진되던 업무 방식을 탈피하여 그간의 업무를 진단하고 현안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혁신 방안을 강구하여 도시 재생 분야 전반에 걸쳐 광주다운의 회복과 품격 있는 광주 실현으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고자 하는 민선 7기의 시정 철학이 광주다운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논의된 혁신 정책의 주요 내용은 먼저 광주다운 도시 계획 수립 방향을 '회색도시에서 디자인도시로' 바꾸는 것으로 잡고, 이를 위해 도시의 불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며, 관 주도에서 거버넌스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건축사협회·지역건설협회·광주시가 디자인 향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민·관·학 공동으로 광주다운 도시 건축 현장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주도형 경관 포럼을 통해 '실현가능한 광주다운 경관 추진 전략'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공공 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하는 광주시만의 공공 디자인 종합 진흥계획(마스터플랜)도 내년말까지는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공모를 통한 주민 참여형 뉴-거버넌스 재생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문화·역사 복원 및 도심 활성화 증진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재생 사업인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높은 역점력이 허용되는 상업 지역 등의 난개발 및 조망권 문제 해결을 위해 가로 구역별 높이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고시하기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서민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되 타 도시와 구별되는 광주다운 임대주택 정책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흑자들은 인구 200만의 광주 건설이 어렵다고, 꿈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광주다운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하며 유일한 것을 발굴하여 도시 전역에 확산시키고 상품화·브랜드화해서 좋은 일 자리를 만들고 광주 경제를 살려간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無等鼓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강진에서 10년째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1810년, 부인 홍 씨가 인편에 낡은 치마 5-6폭을 보내왔다. 34년전 혼례 때 입었던 붉은 치마였다. 병든 부인이 치마를 보내온 애절한 속뜻을 읽었던 것일까. 다산은 색 바랜 치마를 가위로 잘라 10대 두 아들(학연·학유)에게 일깨우는 말을 적은 4점의 서첩(書帖)을 만들었다. 이를 '노을처럼 붉은 치마로 만든 집'이라 해서 하피집이라 했다. 그리고 3년 뒤 외동딸을 제자 윤창모에게 시집보내며 나머지 치마 천에 '매조도'를 그려 선물했다.

'아버지' 다산(茶山)

다산은 '매조도' 화제(畫題)에 시집가는 딸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았다. "...이제부터여기에 머물러 지내며/ 가정 이루고 즐겁게 살아가/ 꽃도 이제 활짝 피었으니/ 열매도 주렁주렁 맺으니." (박석무 지음 '다산 정약용 평전' 중) 하피집은 오랫동안 '하피집에 부처'라는 다산 시를 통해 이름만 전해질 뿐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 2003년에 우연하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200년 만에 발견된 것인데 그 과정도 극

적이었다. 수원 공사장에서 파지를 수집하는 할머니 손수레에 실린 '하피집' 3점이 한 사업가의 눈에 띄었던 것이다. 올해는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태어난 지 256년, 돌아가신 지 182주년, 유배에서 풀려난 지 200년이 되는 해이다. 선생이 해배(解纜)되자 18 제자들이 다산계(茶山契)라는 결사를 만든 지도 올해로 200년이 됐다. 그래서 평생 다산 정약용을 연구해 온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올해를 '다산의 해'라고 말한다. 마침 강진군 다산기념관에서는 '하피집'이 공개되고 있는데 ('다산유물 특별전', 9월 16일까지) 대학자가 아닌 보통 아버지의 모습, '인간' 다산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다산은 어린 두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선생 역시, 18년 동안의 긴 유배 생활 속에서 '목민심서' 등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면서도 끊임없이 두 아들에게 당부하는 편지를 쓴 보통의 아버지였다. 백련사 배롱나무꽃도 볼 겸 조만간 다산기념관에 들려라겠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정 계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납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채 투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